더 교활해진 '보이스피싱' 어르신 '속수무책' 당한다

5년간 도내 피해액만 8천억원 육박
연령별 피해자 50대 이상 가장 많아

악성 앱 등 갈수록 수법 진화하는데
피해방지 관련법 입법 논의 '제자리'
정치·법조계 "고령층 보호대책 시급"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 수법이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고령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모두 4만2천956건 발생해 피해액이 7천8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 연령대에서 50대 이상 피해자는 2017년 31.2%에서 2019년 47.7%로 증가하다 이듬해 45.92%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다시 51.27%으로 늘어 절반이 넘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조선족 말투가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능숙한 표준어 구사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대출사기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고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주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성남에선 검사를 사칭해 7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23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A씨는 '해외 직구로 골프채를 결제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문자를 받은 A씨는 메시지에 담긴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가짜 검사로 등장한 B씨는 A씨의 금융계좌가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만했고, 본계좌에 있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다른 계좌로 옮기도록 했다. B씨는 원격조종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23억원을 가로챘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인구가 꾸준히 느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도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혜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체계적 입법을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피해', '고령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필요하다"며 "효과적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이미 금융 피해를 받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등의 법안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철없는 가을 모기 극성 때늦은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27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주택가에서 구 관계자가 모기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학교 주변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 운영

인천 유해시설 38곳 적발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 3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씨(46)와 불법 PC방 업주 B씨(30) 등 4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160m가량 떨어진 곳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유해시설은 성매매 다방 18곳(입건 19명), 성인 게임장 13곳(13명), 퇴폐 마사지업소 7곳(1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주변 유해시설 34곳을 적발했는데 하반기에 더 늘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뉴스는 경기TV 즐거움은 퍼니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사전예약

검사 건수 1만2천181건… 신규 확진 3만9천425명·道 1만1천384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개량백신을 활용한 겨울철 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9천425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천467만3천663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만4천168명)보다 2만5천257명 늘었지만, 통상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데 이 같은 경향이 이날 집계에 반영돼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화요일 발표치만 따지면 이번 재유행 초기인 지난 7월12일(3만7천336명) 이후 11주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401명으로 전날(427명)보다 26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6명으로 직전일(33명)보다 7명 감소했다. 신규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15명(56.7%)이고 70대 3명, 60대 6명, 50대 1명, 10세 미만 1명이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에선 총 1만1천3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MUST WIN COVID19

9월 27일 현황 (0시 기준)

	단위:명	(변동)
경 기	6,627,542	(+11,384)
인 천	1,422,196	(+2,489)
전 국	24,673,663	(+39,425)
사망자	28,272	(+26)

60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1순위 접종

아울러 이날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더나 개량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가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을 이날부터 받고 있다. 이번 개량백신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1순위 접종 대상이다. 추진단은 향후 BA.4나 BA.5에 기반한 2가 백신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제약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입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독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려면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규기자

이별 통보 여친에 10시간 동안 전화 스토킹
인천지법,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개월' 선고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10시간 동안 2~3분 간격으로 전화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으로 몰래 들어갔고, B씨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당일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집요하게 전화를 걸다가 직접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렸지만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이민수기자